

---

[ 토론회 ]

#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시대 지역 에너지 빈곤층 대책은?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14시

장소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대회의실

주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주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

후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프로그램

14:00 개회

14:00 사회                    김영배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이사장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4:05 발표(25분)

청주시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14:30 토론(각 7분, 50분)

조종래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손은성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평사회위원장  
이현주 청주시에너지센터장  
홍순덕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준석 행복디자인‘사람’ 대표 활동가  
임은성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

15:20 종합토론

15:40 폐회

## 목차

발 제	청주시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1
토론1	청주시 주택가(복대2동) 중심의 에너지 빈곤층 현황과 제안 / 조종래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팀장	22
토론2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확대 이루어져야 / 손은성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평사회위원장	25
토론3	더위와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 이현주 청주시에너지센터장	29
토론4	「지역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한 청주시 방안 / 홍순덕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31
토론5	청주시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과제와 지방 정부의 역할 /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7
토론6	에너지복지는 단순히 춥고 더운 문제가 아닙니다 /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	39
토론7	지역 의원으로서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책 / 임은성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	47

# 청주시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2023. 6. 14.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발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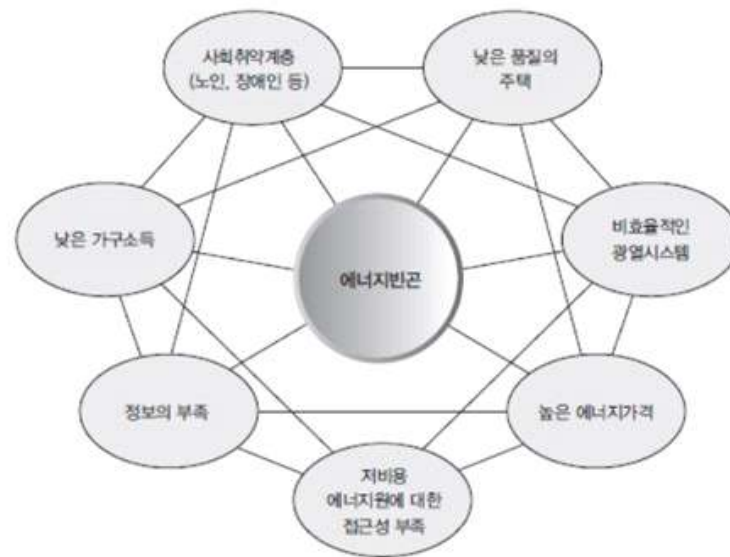
## ❖ 발표의 전제

-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 빈곤/복지, 에너지 공공성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에 대한 종합적 접근 필요
- 기후위기/재난, 지구 (위험) 한계선, 에너지 전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맥락 반영
-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설정 및 역할 재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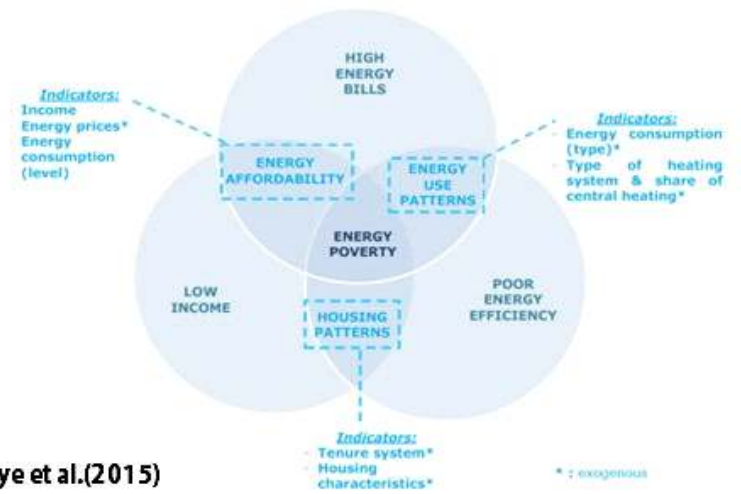
## ❖ 주요 내용

- 에너지 빈곤/복지의 구조적 동학 이해
-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너지 공공성 관련 쟁점 고려
- 최근 정부와 지방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의 현황 파악
- 에너지 기본권/에너지 복지 실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검토(자치법규 포함)
- 에너지 기본권/에너지 복지 실현 위한 청주 등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 토론

# 에너지 빈곤 원인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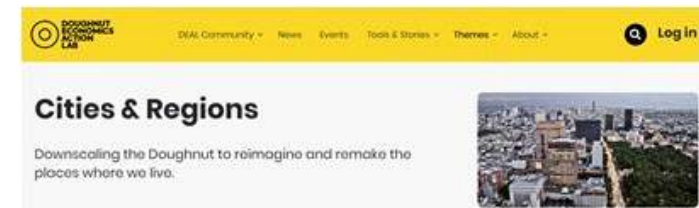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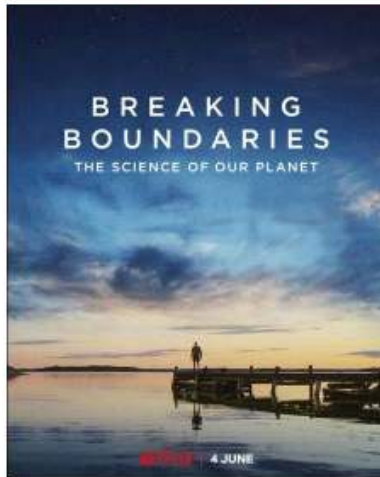


\* 자료: 진상현 · 박은철(2009)



\* 자료: Pye et al.(2015)

# 지구 (위험) 한계선과 도넛 경제학



# 2022년 한국 이상기후 발생 분포와 주요 피해 현황



분야	현황
농업	여름철 남부지방 가뭄으로 전라남도에 1,422ha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409.7ha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었으며, 33,910마리의 가축폐사가 발생하였음
해양수산	고수온에 의해 2개 지자체(전남, 제주)에서 17억여원의 양식생물(조피볼락, 강도다리, 납치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저수온에 의해 1개 지자체(전남)에서 8억여원의 양식생물(감성돔 등) 폐사 피해 발생
산림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로 1,701가구에서 송이, 표고, 밤 등 피해를 입었으며,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면적은 3,791ha에 달했음. 주산지 적산온도의 전년대비 감소로 산림과수(밤, 딸은감, 대추, 호두)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엽일이 최대 7일 늦게 시작됨. 8월 집중호우로 284ha 및 태풍 '힌남노' 로 35ha 산사태 각각 발생
환경	폭염과 가뭄으로 낙동강 유역에 대규모 녹조 발생, 수도권 일대 러브버그 대규모 출현 등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해충 출현 증가하였음
건강	여름철 폭염으로 1,564명(사망 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고, 겨울철(21.12.~22.2.)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자가 300명(사망 9명)이 발생(전년 대비 30.7% 감소, 사망자 2명 증가) 하였음
국토교통	8월 8일 서울시 일대에 쏟아진 시간당 100mm이상의 폭우로 8명의 사망자와 침수피해 차량 1만여건 이상 발생. 빈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수도권 일대에서 도시침수 피해 집중 발생
산업에너지	6월 이른 더위, 7월 폭염 및 열대야 등의 영향으로 냉방 수요가 증가하여 하계 건물 부문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기록(90,932GWh로 전년대비 4.6% 증가), 태풍 힌남노로 전국에서 200건의 전력설비 고장으로 89,743호에 정전사태 발생
재난안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30명(사망 28, 실종 2)의 인명피해 발생 및 5,728억원(공공 4,668억원, 사유 1,060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대설로 9.34억원의 재산피해와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 동파 9,825건 발생하였으며, 폭염으로 가축 838천마리, 양식생물 1,109천마리 폐사하였음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 유럽 에너지 기본권 운동



## Access to affordable, clean energy as a basic human right

All should have access to a minimum amount of energy. The inhumane practice of energy disconnections puts peoples' lives in danger and should be prohibited by law.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all those who cannot afford to light, heat or cool their homes, for example through social tariffs or a free basic energy allowance.

## Energy democracy

People have a right to make decisions about what energy they use and how it is generated. Regulatory frameworks must be developed to support these rights, including setting up and participating in community energy initiatives. Democratising the energy system, through public and community ownership and control of energy, is a necessary condition to ensure a just transition to fossil-free energy.

## Decent, energy-efficient and affordable housing for all

Massive renovation programs, particularly benefiting low-income households, would address the housing crisis in Europe, as millions are denied the right to housing or live in homes that make them sick, waste energy and warm our climate. Renovating our homes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would cut our emissions while also creating millions of jobs. The European Union should take a lead decisive role in directing funds and mobilizing political will for such programs. It must ensure that no additional costs in housing or bills are passed on to vulnerable households, and that works are carried out to a high standard subject to strong regulations, independent scrutiny, and accountability to residents.

\* 자료: Right to Energy Coalition

# Don't Pay & Windfall Tax



\* 자료: Campaign For Vulnerable People - Don't Pay UK



\* 자료: 한겨레(2022.8.28)

## 환경세 논의현황 및 효과

### 1 현황

- 환경세는 이론적으로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담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 환경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과도하거나, 기업이 그들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익임<sup>17)</sup>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 따르면 환경세는 기업에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이 산업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때 정부가 금전의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임<sup>18)</sup>
- 환경세는 소득과세의 형태(Income Tax Approach) 또는 소비과세의 형태(Excise Tax Approach)의 형태로 고안될 수 있음
  - 소득과세 형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결정된 수익률 이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납세자가 초과소득에 대해 특정 유형의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운영됨
- 해외 주요국의 환경세 관련 논의 및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석유회사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Excise Tax)로 과세하는 법안이 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논의중임<sup>19)</sup>
    - 동 법안은 하루에 최소 300,00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의 판매에 대해 적용되며 배럴당 현재 판매 가격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럴당 평균 석유 가격간의 차이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음<sup>20)</sup>
  - 영국의 경우, 영국정부는 2022년 5월 26일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정책을 발표하였음<sup>21)</sup>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2022.8.2)



\* 자료: 이투뉴스(2022.8.25)



\* 자료: <https://www.euronews.com/green/2022/09/15>



\* 자료: 세계일보(2022.9.21)

# 에너지 요금 & 에너지 공공성 논쟁

##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 탈핵을 추진하라!
-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2대 방향

자본의 이윤추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불커, 산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10

## 6대 핵심 요구

11



'요금인상'이 아닌  
'에너지공공성'이 답이다

진보당 필수에너지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3년 5월 25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

**진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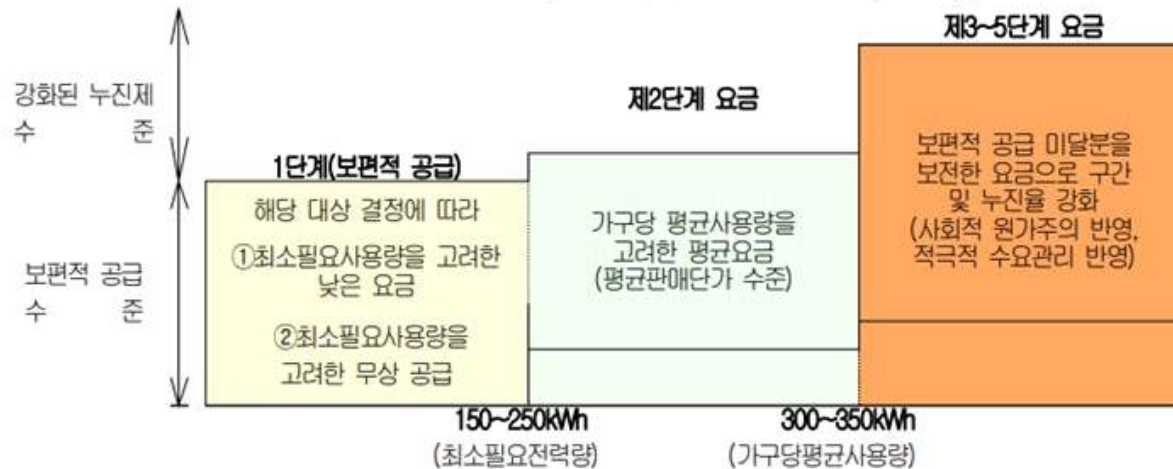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전기요금과 에너지 기본권

## ❖ 적정 필요 전력량 보장과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 에너지 기본권의 원칙은 (전력 부문에 국한하면) 전기 사용과 전기 요금을 사회공공적 필수재와 사회공공적 요금으로 인식할 근거를 제공
-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이제 요금 정액 지원보다 '적정' 또는 '최소' 필요 전력량을 정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누진제가 서민층에게 일정하게 요금을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누진율을 확대하고 무상 전력 필요량의 기준선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누진제가 주택용 전력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행 누진제를 강화해 기본 틀을 강화해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을 재조정해야 함(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1)



# 에너지 기본권 & 에너지 복지 관련법

## ❖ 에너지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
-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
  -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 유사 개념: 소외계층, 취약계층, 빈곤층
    - 정책적 기준: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
  -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 발급,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정보시스템연계
-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을 받음
-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에너지 복지 조례 현황

## ❖ 에너지 기본 조례 이외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흐름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2017년 제정)
  -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2019년 제정)
  -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2020년 제정)
  -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2021년 제정)
  -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2023년 제정)
  -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2023년 제정)
  -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2023년 입법예고) 등
- 에너지 복지, 에너지이용 빈곤층/취약계층/소외계층/빈곤지역 등 정의
-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 가능)
- 에너지 복지 위원회(에너지위원회 대행 가능)
- 실태조사(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수요 등) 등

## ❖ 서울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에너지 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 에너지복지 사업
-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4)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및 육성
  -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등

# 에너지 복지 조례 특징

##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에너지 빈곤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
- “에너지 빈곤지역”이란 에너지 빈곤가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 1) 에너지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3)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 4)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에너지 복지 기금

## ❖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 선정
  - 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
  - 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

- 에너지 복지 사업
  -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 5)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등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 • 에너지센터 업무

-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 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 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홍보 지원 및 관리
-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등

## ❖ 청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 기본원칙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조사연구 2018-04

### 청 주 시 주 거 · 에 너 지 빈 곤 연 구

연구책임 | 최재욱 청주복지재단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 최현정 충북대학교 교수  
홍익희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연구보조 | 박석훈 청주복지재단 연구원



\* 자료: 청주시에너지센터



# 지방정부 에너지 복지 모델 연구 사례(서울시)

## ❖ 서울시 에너지복지 조례(안)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형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전략수립, 서울시, 2016

### 1) 제정 목적

- 에너지 문제의 보편적 보장
-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 자원 마련 및 운용 명시
- 에너지정책과의 연관 목적 적시(주택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일조, 저소득층 녹색일자리 창출 등)

### 2)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정의 확대 규정(ex: 소득 대비 광열비 지출이 높은 가구 개념 도입)
- 향후 시행규칙으로 명확하게 규정

### 3) 지원사업

- 에너지복지사업 개념 규정
- 저소득층 에너지전환사업 :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
- 저소득층에너지효율화사업 : 주택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진단 / 주택 개선 지원 /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등
-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 긴급 에너지비용 등
- 유관 인력 양성 및 운용

### 4) 에너지복지기금 설치

- 자원마련을 위해 모금을 통한 기금 조성, 지자체차원의 회계근거 규정
- 국고보조금, 기업, 시민 등 출연금, 기부금 등
- 자원 운용의 주체 규정(사업체계 연계, 관리는 서울시가 직접 담당)

### 5)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

- 서울시에 협치형태의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
- 사업심의 및 기금 심의를 담당

### 6) 지원절차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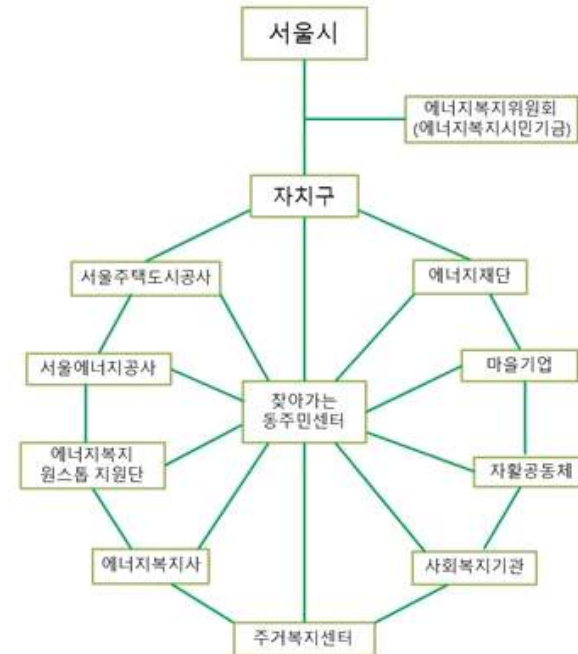
- 지원 및 감독 기관: 서울시로 제한
- 시행기관: 서울시 내 단일부서 혹은 전담기관으로 산하기관이나단체 위탁 가능

### 7)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 지원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양도 금지
- 임차인 권리기간 이내 임대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자 지원기금 반환규정을 명시하고 협약

## ❖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의 지원체계(안)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용역, 서울시, 2017



# 현행 에너지 복지 제도

## 가. 주요 추진 실적

### ○ 바우처 신청 현황

(단위 : 천 세대,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급세대	565	642	661	777	1,133
발급액	57,592	69,906	75,058	97,831	401,181

### ○ 시도별 신청 현황

(단위 : 천 세대)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101.0	114.2	117.7	139.6	197.1
부산	56.8	63.9	67.3	79.8	112.3
대구	35.3	41.1	41.6	48.5	68.2
인천	34.3	40.2	42.5	51.1	75.0
광주	18.5	21.9	22.6	25.5	37.9
대전	17.4	20.0	20.2	23.1	33.6
울산	7.2	8.5	9.0	10.9	19.0
세종	1.3	1.5	1.7	1.9	3.3
경기	92.6	105.9	109.5	127.5	200.4
강원	20.5	24.1	24.8	28.3	40.1
충북	17.5	19.5	19.9	23.7	36.6
충남	21.8	23.7	24.1	28.9	41.6
전북	32.0	35.8	36.4	42.3	59.4
전남	29.4	31.8	31.4	36.8	51.3
경북	34.9	39.7	40.7	48.1	66.5
경남	37.7	42.0	43.4	51.1	76.4
제주	7.1	7.9	8.1	9.3	14.3
합 계	565.5	641.8	660.9	776.6	1,133

- 세목의 반올림에 따라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사용기간(23. 4월) 종료 후 최종 정산 예정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3),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용기간	신청 바로가기	
비영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공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상부·질환자 포함 가구 및 한부모·소년소녀가구	6대 에너지 비용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 가상카드(고지서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22년 지원금액: 평균 12.7만원 * 가구별 지원액: (1인) 103,500 (2인) 146,500 (3인) 184,500 (4인) 208,500	[신청] 5 ~ 12월 [사용] 10개월 * 여름 7 ~ 9월 * 겨울 10 ~ 4월	신청 사이트
	연탄쿠폰 (광해광업공단)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취약계층 (한부모,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연탄 구매비용: 가구당 47.2만원	[신청] 6 ~ 8월 [사용] 10 ~ 4월	신청 사이트
	등유바우처 (에너지공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소년소녀세대 (등유보일러)	등유 구매비용: 가구당 31만원	[신청] 8 ~ 9월 [사용] 11 ~ 3월	(현재 미공고 중으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이웃지원사업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재단)	기초생활수급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 사회복지시설	창호·단열·바닥 효율개선 시공 보일러 및 에어컨 지원 - 지원한도: 가구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 시설통균 1,000만원	[신청] 2월 ~ 상시 [시공] 4 ~ 11월	신청 사이트
	LED 지원 (에너지재단)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및 공공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조명기기(LED) 교체 지원 * 고효율인증·1등급 LED조명 제품 [지원비율] 지자체 매칭사업 국비: 저소득층(70%), 복지시설(50%)	[신청] 전년도 [조명교체] 4 ~ 11월	신청 사이트
에너지사업	전기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생계, 의료] 16,000원/월(하계 2만원) [주거, 교육] 10,000원/월(하계 1.2만원) [차상위계층] 8,000원/월(하계 1만원)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도시가스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자격별 계절별 차등 지원 [취사난방] 1,650원/월 ~ 24,000원/월 [취사전용] 420원/월 ~ 1,680원/월	상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지역난방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생계, 의료] 10,000원/월 [주거, 교육] 5,000원/월 [차상위계층] 5,000원/월	상시	

# 에너지 복지 민간 지원 사업

## ❖ 한국에너지재단 민간협력사업

1. 에너지 전환형 협력사업
  - (추진방향)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하고 취약계층(지역)의 에너지복지 제고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사업모델의 정착 및 확산
  - (주요사례) 사회적 경제조직 · 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영농형 태양광 지원사업
2. 에너지 효율형 협력사업
  - (추진방향) 주거 · 생활공간의 노후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량(비용) 절감을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증진 및 온실가스 저감
  - (주요사례) 사회복지시설 · 가구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사업(단열 · 창호 개선, LED · 고효율기기 지원 등)
3. 에너지 공급형 협력사업
  - (추진방향)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계절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 에너지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주요사례) 혹서 · 혹한기 계절 나기 지원사업, 동절기 난방유 지원사업
4. 이익공유형 협력사업
  - (추진방향)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장애적 요소 중 하나인 주민 수용성 제고와 더불어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선순환 모델의 정착
  - (주요사례) 영농형 태양광 이익공유 사업

##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 사회복지 사각지대와 에너지의 관계

##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개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2014년~)
-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39종 위기 정보 입수대상자 중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발굴,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2022)

## ❖ 발굴시스템 연계 주요 정보 (「사회보장급여법」)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 <sup>1)</sup>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 <sup>2)</sup>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 <sup>3)</sup>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 2022~2023년 에너지 복지 정책 변화

- ❖ 최근 중앙정부 에너지 복지 정책(기존 패러다임 유지)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2022년 11월)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2022년 12월)
  -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2023년 1월)
  - 동절기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2023년 2월)

등



2023년 2월 7일 <난방비 할인, 내달라 공공일대> : 동자동 주민 공공주택사업 계획 발효 2년, 안락한 시골 휴식 공간 조성 (사진=빈곤사회연대)

\* 자료: 빈곤사회연대(2023)

붙임1		'보조금24.에서 확인가능한 난방비 지원금 목록'(23.1월말 현재)		
구분	연번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전국 공통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구 등에게 최대한도에 따라 년 27.7만~67.7만원 지급
	2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등에게 단열창호배치공사 및 보일러 보급지원
	3	보건복지부	간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간급지원 대상 가구에 50만원내 전기연료비, 연료비(110,000원) 지원
	4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8,000~1,600원(저소득가구에 한함) 전기요금 할인
	5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기초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등에게 월 4,000~1만 원(지역별)에 따라 요금 지원
지역별	6	경기도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	기초생계/의료 중증장애 등에게 가구당 난방비 5만원(5개월), 장애인 4만원(3개월) 지원
	7	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52%이하 미혼모 가구 등에게 혹서기 혹한기 난방비 지원
	8	경기도 과천시	기초생활수급자 월난방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가구당 월 5만원
	9	경기도 광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월난방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월 10만원 지급
	10	경기도 영등포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동절기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11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난방비 지원	저소득(중위52%이하) 한부모 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5개월)
	12	경기도 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월난방비 지원	기초수급자 중 저소득 노인가구에 난방비 지원
	13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중위52%이하) 한부모 가구에 난방비 지원
	14	강원도 홍천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50%이하에게 가구당 10만원 지급
	15	강원도 철원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동절기 월동난방비 부족분 보충지원
	16	강원도 원주시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급
	17	경상남도 고성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에게 단열 창호공사 및 난방기기 지원
	18	경상북도 울릉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에게 난방비 지원
	19	광주광역시	저소득 및 소외계층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노인 등에게 연탄 및 동유 교환 우선 지원
	20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자에게 난방비 및 고온관리비 지원
	21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서울 거주 기초·유료차상위 등에게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초수급자 중 위·20%이하에게 난방비(연료비) 지원
	23	울산광역시	저소득 노인복지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난방비 최대월 5만원, 난방비 최대월 10만원
	24	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층 특별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30만원내 지원, 기초(주거) 교육수급자 20만원내 지원
	25	전라남도 구례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중위 60%이하 저소득자에게 난방비, 난방비, 이불, 방한용품 등 지원
	26	전라남도 장흥군	월동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가구당 20만원
	27	전라북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기초수급 차상위 노인 한부모 등에게 보일러/수리, 노후부품 교체 지원
	28	제주특별자치도	클로저는 노인 에너지지원	노인돌봄 대상자 중 기초 차상위 등에게 난방비 연 85,000원 지원
	29	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 차상위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
	30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중위52%이하 한부모에게 월 6만원(4개월) 지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

# 최근 지방정부 난방비 지원 현황과 쟁점

## ❖ 현황과 쟁점

-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표현의 지방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 추진(경기도 파주시 촉발)
- 지원 대상: 선별 지원 vs 보편 지원 논란

-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2023년 제정)
-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2023년 입법예고)
- 일부 광역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활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발의)
- 사회재난에 “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신설



지자체도 앞다퉈 난방비 지원... '보편·선별' 또 논란?  
2023년 12월 13일 11:45:57



**난방비 보편지원 교부세 페널티가 지방자치 실현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어 복지 축소 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취지를 위배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는 청결성 복지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다만, 천 주권, 모든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청결성 지출을 하는 경우에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입니다.
- 보통교부세 재원을 재정의변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기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

## ❖ 에너지 복지의 지방분권화

- ‘에너지 분권 및 지역에너지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연구·조사한 결과, 에너지 사무 중 에너지 복지의 지방 분권화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음
- **분권 의미:** 에너지복지 사무의 기초/광역 위임 및 이양으로 주민·현장 밀착형 복지정책 실현
- **제도 개선:** 에너지법 개정(1순위: 기초 위임·이양, 2순위: 광역 위임·이양-기초 재위임), 광역/기초 에너지조례 개정,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전달체계 개선 등
- **주요 쟁점:** 기초와 광역의 책임과 권한 설정, 관련 예산·인력·조직 등 전달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통합 방안 필요(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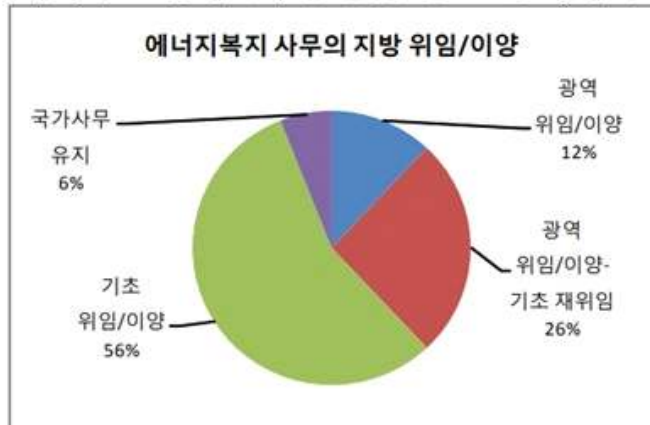


표 18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 개요

번호	구분	주요 내용	역할분담 방안
1	의사결정	광역에너지위원회에 기초 참여와 광역-기초 간 (상선)정책협의회 운영	광역-기초 협력관계 형성
2		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 검토 시 지자체 의견 제출 의무화	광역-기초의 의견 제출 및 자체 계획에 반영
3	계획수립	광역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기초단체장의 의견 수립 의무화	광역-기초 의견수립 절차 확립
4		기초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 에너지계획 수립 및 광역 에너지계획과의 정합성확인제도 확보
5	핵심사무	에너지복지 사무의 지방 위임/이양	(1순위)기초 위임/이양, (2순위) 광역 위임/이양-기초 재위임
6		광역/기초 발전사업 허가권 발전용량 확대	광역-기초의 발전사업 허가권 상향 조정(광역 10~40MW 범위, 기초 3~10MW 범위)
7		에너지 진단관리 감독권한과 개선명령	광역 위임/이양 혹은 광역 위임/이양-기초 재위임
8		지역별/개별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제한 권한	광역 위임/이양 혹은 광역 위임/이양-기초 재위임
9	제도기반	사업별 보조금의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	광역의 포괄보조금 일괄 신청후 기초에 재분배(중앙정부는 포괄보조금의 산장분배 기준 마련)
10		(수요관리/발전/배전/판매사업 가능) 에너지혁신지구 특례제도 도입·지정	지역 여건과 역량에 따라 지구 지정 신청·실현(중앙정부는 종합 평가 후 법제도와 방안 마련)

**감사합니다**



[ 토 론 1 ]

## 청주시 주택가(복대2동) 중심의 에너지 빈곤층 현황과 제안

조종래(서부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1.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 빈곤가구 현황

- 복대2동은 1990년대 초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로 6층 이상 아파트가 없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 밀집 주거지역이다. 신축 빌라를 제외하고 평균 월세가 20만원 남짓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권역별 기초생활수급자 수 비교표]

구분	전체인구 / 기초생활수급자수				2022년 기준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경동	50,493 / 1,208	51,494 / 1,390	55,623 / 1,569	55,545 / 1,641	2.9
복대1동	51,343 / 601	51,726 / 789	50,696 / 861	49,957 / 942	1.9
복대2동	16,772 / 728	16,233 / 831	15,890 / 943	15,991 / 1,039	6.5
사창동	15,379 / 580	14,925 / 657	14,688 / 743	14,571 / 776	5.3
성화개신죽림동	46,736 / 2,055	45,109 / 2,244	43,445 / 2,221	43,201 / 2,333	5.4

<청주시 통계정보 2022년 12월 기준>

- 복대2동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율: 6.5%로 관할구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가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대규모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어 비교적 높음)  
- 코로나 19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가구가 늘어남. (실제 코로나 19로 실직과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이주한 주민이 많았음)  
- 신도심과 구도심과 지역발전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셋집이 있는 복대2동으로 이주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1인 가구, 이주민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권역의 1인 세대 조사표]

서부복지관 권역	가경동	복대1동	복대2동	사창동	성화개신 죽림동
1인 가구 비율	29%	37%	60%	62%	42%

\* 청주시청통계자료 2022년 12월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노후 주택으로 에너지 빈곤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현황

### ①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 ㉠ 아파트

- 관리사무소 등 주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 비교적 관리가 용이
- 또한, LH,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한 지원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 ㉡ 주택(\*LH 매입임대 주택 아파트와 상황이 비슷함)

- 에너지 빈곤 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월세도 싸게 주는데 그것까지 해줄 수 없다.”)
- 이에 대부분의 주택 관리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상황임(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민간 복지기관 등이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복대2동의 경우 대부분 주택이 1990년대 초반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심하고,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지어진 경우가 많아 단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추위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저소득층의 거주지는 대부분 주택의 1층 혹은 (반)지하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더위에 매우 취약함.

### ②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 및 지원체계

#### ㉠ 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 감면제도로 인해 부담이 덜 하고, ‘에너지 바우처’사업으로 동·하절기 일시적 에너지 부담 경감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가정 중에서도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 자격이 제한됨)
-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인해 단열, 창호교체, 에어컨 설치 등의 지원이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도권 내 지원체계가 있어 비교적 상황이 나음.

#### ㉡ 기초생활수급자 외 저소득층

- 복지기관 등을 통한 지원 외 지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에너지 복지정책)**
- 환기가 어려운 주택 구조상 더위에 매우 취약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에어컨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음.(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 있더라도 노후 된 에어컨으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기기로 인해 에너지 부담이 가중됨)
- 혹한기에는 노후 된 창호와 단열이 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매우 떨어져 에너지 비용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로 생존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최근 에너지 비용이(전기·가스비) 폭등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 증가

3.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제안

1) 에너지 관련 복지정책의 대상 완화

- ‘에너지 효율 사업’,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을 완화하여 애매한 소득수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에너지 효율 사업은 냉방지원 사업은 조기 종료되고 단열 및 창호 교체 등의 예산은 남는 경우가 많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가 필요함.

2) 총복합 주거복지정책 강화

① 에너지 빈곤 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민간 복지단체와 협력하여 에너지 빈곤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에너지 빈곤 가구의 혹서기, 혹한기 시 특별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창호 및 단열 시공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필요

[ 토 론 2 ]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확대 이루어져야

손은성(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평사회위원장)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평사회위원회에서는 2022년 6월~11월 청주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가구)과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 주에너지원, 폭염한파 취약성, 재난대피처, 정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5가구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조사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9월 12일 ~ 10월 11일까지 총 30일 동안 진행하였음. 조사문항은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 연구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음. 최종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31가구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38명(16.5%), 기타 저소득가구 18명(7.8%), 일반가구 175명 (75.8%).
- 연구의 배경에는 에너지 전반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에너지 분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음. 특히 개인 차원에서는 에너지가 생활 수준이나 소비 여력에 따라 이용하는 소비재로 여기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 관점이 요구됨. 충청북도의 제6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논의가 생태환경을 고려한 적정 에너지 이용의 기준이나 방안을 둘러싼 논의보다는 특정 산업에 대한 개편이나 육성, 요금제 개편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저효율성이나 고비용 문제, 지역적 문제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제약을 겪는 사람들의 일부만이 에너지 빈곤 가구로 선정되어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에너지 빈곤에 대한 대응은 2000년대 이후 들어서 모든 정권에서 강조해 온 문제. 2000년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해 에너지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정작 에너지 빈곤이 무엇인지,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 관점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빈곤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도 미흡한 실정.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기본권의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 지표를 구체화하고 에너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 실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 에너지 빈곤은 무엇보다 에너지 선택의 부재를 의미함. 에너지를 자유롭게 이용하

지 못함은 취사 및 냉·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정치에 대한 정보 및 참여 접근과 같이 개인 및 집단적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로부터 박탈되는 것을 의미함.

- 국내 에너지복지정책은 크게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현물보조정책, 현금보조정책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은 기존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및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 단열공사, 창호공사, 조명기기 무상교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지원 등
  -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를 바우처 또는 현물의 형태로 무상 제공하는 정책. 에너지 바우처사업, 난방유지원사업, 연료지원사업, 연탄보조사업 등
  - 현금보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정책.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등
-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에너지바우처사업이 큰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두 정책의 지원대상은 각각 기초생활수급자(혹은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내에서 선정되므로, 양 정책 모두 소득에 기준을 둔 것이 특징. 두 정책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이 선정기준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기 보단 일반적인 소득빈곤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에너지 빈곤과 소득빈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두 빈곤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국내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정책들이 냉방보다는 난방에 치중하고 있음.
- 이번 조사의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영구·공공·국민임대 39.5%로 비율이 높았고, 건축연도는 1990년대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음.
- 폭염과 한파 시 냉·난방기 사용의 양상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층이 차이가 있었음. 가구유형별로 냉·난방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더위나 추위가 아주 심한 날에 잠깐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6%, 기타 저소득가구 44.4%, 일반가구 25.7%로, 기타 저소득가구에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6.3%, 기타 저소득가구는 22.2%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냉·난방 미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는 6.3%가 있다고 함.
- 지원정책의 인지도에서는 전기요금 감면(61.5%, 142가구)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지원 정책의 인지도가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인지도가 20% 이하인 정책은 연탄 쿠폰 9.1%, 등유 바우처 10.4%, 연료지원사업 11.7%,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18.2%임. 대부분의 정책에서 인지도는 정책 수혜 대상에 가까운 기

초생활수급가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순으로 나타났음.

- 조사에서 에너지 빈곤층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는 계층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등 노인 세대가 많았음. 에너지 빈곤은 저소득,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상호 영향을 끼쳐 발생하는 것으로 가구의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패턴, 에너지원의 가격, 에너지 이용기기, 주거 특성 등이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조사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거주자가 많았으며,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대상자는 미흡하지만 일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저소득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에너지 빈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음. 오히려 임대아파트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높았음.
- 주택의 건축연도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거주 주택은 40% 이상이 1990년대 건축물로 3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일반 가구는 2000년대 이후 건축물에 거주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은 오래된 건축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예상외로 이번 조사에서 가정에서의 에어컨 사용이나 에어컨 보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후된 주택에서의 무더위에 취약한 거주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보조난방 시설은 일반가구에서 저소득가구보다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 에너지의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또한 냉·난방기의 이용 빈도에서는 저소득가구는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대부분의 시간에 냉·난방을 사용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높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경제적 이유로 냉·난방을 미사용한 경험에서는 저소득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음.
- 에너지 정책의 미수혜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타 저소득층에서 정책을 잘 모르거나 자격이 안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많게 나타났음.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본인 신청이 아니어도 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 5가구에 대한 인터뷰 결과, 에너지 빈곤층은 적은 소득과 수급비로 난방비 감당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노후된 주택 거주로 인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음. 한파나 폭염 시 사용하는 냉·난방기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가구에서는 조립식 주택으로 여름 내내 에어컨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음. 이는 높은 전기요금으로 이어져 경제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음.

- 외부요인이 동일하더라도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지출과 건강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은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 있음. 저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단열이 부족한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오래된 저효율 가전기와 냉·난방기기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국내에서는 주택단열기준이 강화되면서 노후화된 주택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은 최근에 건설된 주택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적절한 수준의 냉·난방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고효율 가전, 단열 성능이 뛰어난 주거 환경(창호와 단열) 등이 필요함. 그러나 저소득가구일수록 저효율 가전이나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동일한 수준의 냉·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야 함. 결국 저소득가구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는 상대적으로 커지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짐.
- 가난한 이웃들의 비극적인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에너지 빈곤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고 여러 지원제도도 생겨났음. 하지만 2007년 에너지법 제정 이래, 에너지 복지라는 용어는 생겨났지만, 기본권 정립을 통한 장기적인 정책지향이나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실질적 지원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이는 제반사회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에너지는 체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소비여력에 따른 탄력성이 크지 않은 필수재. 에너지 접근의 문제는 필수재에 대한 공공성, 기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

## 더위와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현주(청주시에너지센터장)

### 청주시에너지센터 에너지복지사업

#### ○ 사업의 종류

##### ■ 취약계층 3kW급 태양광 지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의 이전으로 인해 옥상에 설치되었던 태양광패널의 기부를 통해 청주시 연탄사용 24가구에 3kW급 태양광설비 지원
- 태양광 시공업체들의 후원으로 취약계층 대상 3kW급 태양광 지원

##### ■ 펜솔라프로젝트

- 3kW급 태양광설비지원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이동형 태양광 설비 지원

\*『PEN Solar Project』는 뽀족한 펜처럼, 에너지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적재적소에 태양광시설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에너지복지형 태양전지 무료지원사업의 명칭입니다.

**P**ortable : 수혜대상자가 거주지 변경을 하더라도 태양광시설을 법적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

**E**asy to use : 가정의 콘센트에 인버터의 출력 플러그를 바로 꽂아 사용 간편

**N**on-Installation Standard : 법적 설치 기준이 없음

##### ■ 결로·외풍 개선 지원

- 벽의 결로로 인한 외풍 및 곰팡이 피해 지원
-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이보드), 창틀 바람구멍 실리콘 작업, 샷시모헤어 교체, 창틀바람막이 테이프 등

#### ○ 대상자 선별 기준

- 주거형태 : ①순위\_단독 ②순위\_다가구 ③순위\_아파트
- 독거노인, 노인가구, 조손, 한부모가구, 장애인, 기타 저소득 가구(수급여부는 조건에 두지 않음) 등 단열(벽,샷시) 취약으로 더위에 추위에 취약한 가구, 신체적 취약 조건으로 냉·난방이 특히나 더 필요하지만 에너지 요금 감당이 어려운 가구, 장애인가구 의료기 사용으로 전기요금의 부담이 있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

#### ○ 대상자 발굴 방법

- 초창기 에너지복지사업 전개시 청주시와 협업하여 대상자를 발굴(수급자 또는 차상위 내에서 선별)하였는데 이미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들이 다수였음. 수급대상자들에게 센터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알맞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급자에 비해 저소득가구는 주택 및 생활 지원이 되지 않아 생활비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였음
- 복지관, 토박이마을주민, 주거복지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 발굴 노력
- 민민거버넌스, 공동체에 대한 관심, 관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센터 에너지복지사업의 한계

- 3kW급 필요하지만 설치의 어려움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이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 자가 소유라 하더라도 지붕이나 옥상 기반이 약해 설치의 어려움이 있음.  
실제 주인이 설치 동의를 했다 변심하여 세입자 부담으로 철거를 하게된 경우도 있음  
대안으로 펜슬라(미니태양광) 보급을 시도하지만, 주택의 경우 설치장소가 적합하지 않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음  
취약계층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옥상태양광 설치로 공동전기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대상자발굴의 어려움  
받는 사람만 계속.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단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  
지원에 대한 정보 습득도 빠른편인데 반해, 기타 저소득가구의 경우 어느가구인지 파악이 어려움
- 짜깁기 형태의 보수  
지역에너지센터 단위에서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기 어려운 현실.  
설비 보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거버넌스, 연계 등의 역할로 센터가 활용되고,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에너지전환의 연관성(사례:연탄사용가구 태양광 설비 지원)을 확보하는 것,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

##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느낀점

- 취약계층의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한 제대로 된 지원 필요  
난방을 기름으로 하거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취약가구들도 많은데 전기나 가스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되면 해당되지 않는 가구들은?  
주택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의 경우, 본인소유 집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집주인 동의도 어렵고,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되니)  
지원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취약계층일수록 정보 습득 능력이 떨어짐  
정보를 알리려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에너지빈곤층이란?  
에너지빈곤층의 기준 필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더위와 추위로 인해 생계가 위협 받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기후위기시대의,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는 에너지빈곤층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지자체별 지역맞춤형 에너지복지정책 필요  
직업, 주연령대, 주거형태 등이 지역마다 다른 것을 고려해 전국적 동일한 지원정책이 아닌 지역맞춤형 정책 필요
- 통합적 지원 필요  
대상가구에 가보면 샷시를 교체하자면 벽의 단열이 형편없고, 도배를 하자면 곰팡이가 가득해 결로가 문제고, 태양광을 설치하자니 필요한건 전기가 아니라 따듯한 방이 필요해 연탄을 포기 못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존재.  
지원이 조각조각 들어가다보면 집도 온전치 못해지고 지원의 경제성도 떨어져, 흩어져 있는 지원기관들(에너지센터 포함)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고, 태양광과 전기패널을 셋트로 지원하는 방식의 설치중심이 아닌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지원책 전개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고, 매년 선착순 대기.. 공고 즉시 바로 소진 되는 예산탓에 당해 신청해서 당해 설치 불가. 또한 보조금은 3kW가 최대라 옥상이 넓어도 설치를 하지 않음. 오히려 보조금을 주지말고 옥상에 꼭차게 설치를 해서 남은전기는 현금보상이나 판매를 하게 하던지, 보조금을 넉넉히 주어 옥상 가득 설치를 하고 마을마다 ESS를 두어 에너지빈곤층에게 전기를 나누는것도 방법

[ 토론 4 ]

## 「지역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한 청주시 방안

홍순덕(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 ◆ 서언

현재 전세계적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천연가스 유엔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지난 겨울 우리는 폭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혹독한 동절기를 지낸 바 있다.

“앞으로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5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 보낸 ‘경고’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영향을 받는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는 지난 4~5월 낮 기온이 45도에 육박하는 ‘괴물 폭염’을 겪었다. 방콕에선 체감기온이 50도를 넘기도 했다. SNS에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반도 일기예보가 화제가 됐다. MS사가 오는 7월과 8월에 2~3일을 제외하면 한 달 내내 비가 올 것이라는 ‘비공식 예보’를 내놓은 것이다. 기상청도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은 높게 보고 평년보다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지독한 혹서기를 맞이할 수 있다.

### ◆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현실과 지원방안

유엔 세계재해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난 20년 간 1.7배 증가했고 그 기간 전 세계에서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40억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해마다 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6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도권에 쏟아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에서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반지하 거주자였고 발달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었다. 이는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기후변화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빈부격차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받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

기후변화가 닥칠 때마다 취약계층은 생명이 위태롭다. 반지하에 물이 잠겨 사람이 사망하고 다치고, 뉴스에 나오면 정부는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염과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보호규정은 찾기 어렵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근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유일하다.

또한 현재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취약계층 보호 관련 법률안(총 194건) 중 단 한 건, 폭염·혹한 발생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법률안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유일한 법안으로 제안되어 있다.

이 같은 기후위기에 지난 1월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 기후변화는 예측된 것보다 더 빠르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행동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됨.
- 현행 법률에는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뿐이며 국가적응대책에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 폭염·한파 적응 대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 등이 필요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폭염·한파 위험지도 구축이 필요하고, 법적

정비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적응력을 제고해야 함.

#### ◆ “에너지 효율화 정책” 시행 적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이에 반해 위기의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가 여전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주요국 대비 낮은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위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가정 등 모든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용(3.1%)과 주택용(7.6%), 일반용(1.5%) 전력 소비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및 산업계는 물론 범국민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 ◆ 에너지 가격 폭등 및 기후위기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는데 이는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률을 별도 집계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특히 가스 요금은 36.2%이나 급등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증액, 가스 및 지역난방 할인, 전기요금 인상분 저소득층 적용유예 등을 발표하였으나, 정부 또는 한전 등 사업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대상자는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주시는 어려운 사향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 복지센터와 관련 부서가 함께 안내 및 대상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여, 에너지 바우처는 14,447가구에서 14,991가구로 556가구를 추가 발굴하였고, 추가로 지원되는 연탄이 소량이어서

가구별 배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역별로 가구를 묶는 방안을 주관기관에 제안하여 가구에 연탄이 배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의 한국지역난방 및 도시가스사에 시민의 난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전달함은 물론, 지난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어린 이집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개정도 건의하였으며, 민간기관과의 후원 연계를 통한 100가구 등유 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295가구의 월동 난방비 지원,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700가구의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재해구호 기금 활용을 통한 400여 독거 노인 등에 한파대비 난방용품 지원으로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였다.

다만, 상승한 에너지 가격이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서 다가오는 하절기 또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언

첫째, 국회 입법조사처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제안하였듯이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법정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상황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존 지원제도를 심층 분석해 에너지 취약계층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지역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 효율화 정책사업 시행이다.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감조치는 물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및 재해구호 지원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및 화석에너지 시설 가동을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를 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청주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내용

○ 에너지바우처 지원 **국비, 신성장산업과**

1)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세대

2) 지원내용

구분	사용	사용기간	비고
여름	전기	7월 ~ 9월	
겨울	요금할인: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中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LPG, 연탄,전기, 도시가스	10월 ~ 4월	

3) 2022년 지원현황

(단위:가구/천원)

전체 수급자가구	에너지바우처						비고
	대상가구수	발급가구수	발급률	생성액	사용액	사용률	
26,174	16,083	16,055	99.8%	5,796,677	5,062,604	70.1%	

※ 5월~ 7월말까지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전산오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 신청을 받을 예정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행

1) 지원대상 : 난방 설비 보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2)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가구당 평균 242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 **전기요금 인상분 저소득층 유예**

- 요금인상 시행일자 : 2023. 5. 16.
- 인 상 율 : 5.3%
- 사회배려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요금인상분 적용 1년간 유예

○ **재해구호지원사업(폭염예방대책) 도비**

- 1) 지원대상 : 에너지 취약계층
- 2) 사업기간 : 2023. 6. ~ 8.
- 3) 사 업 비 : 55,000천원 ※ 재원 :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 4) 지원내용 :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물품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용 지원 및 냉방기기 수리비 등 지원

○ 기타 : 요금감면제도

**기타 지원내용**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신규 시행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세대
  - 지원내용 : 575세대 / 세대당 200천원 지원

**타지자체**

- 전주시 : 에너지 취약계층 여름나기
  - 노인맞춤돌봄협의회 수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행인력 폭염 특보시 행동요령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대부분의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운영

[ 토 론 5 ]

## 청주시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과제와 지방 정부의 역할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 에너지 복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득 수준, 에너지원, 에너지가격, 주택 상태, 취약성(연령, 장애 등), 정보 접근성 등 다차원적인 요소에 의해 에너지 빈곤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적응 정책, 사회복지 정책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현행 에너지복지 정책·사업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단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 외에 추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거나 신청주의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이 자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긴급지원제도의 경우 행정 기관에 의한 선별이 이뤄지기도 한다(예: 행정복지센터 추천). 에너지 바우처, 요금 할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관할 조직에 따라 분산되면서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반복되고 있다. 주택 노후화, 가구 구성, 에너지원, 소비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에너지 빈곤 지표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용 지원, 요금 할인이 중심이 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주택 단열이 안될 경우 비용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주거상향, 단열 개선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은 에너지 빈곤층을 더 넓게 포괄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조례를 눈여겨보게 만든다. 에너지 복지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거나 에너지 복지와 사회복지를 결합하는 방안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복지 정책·사업의 확대를 위한 기금 설치도 눈에 띈다.
- 기후위기를 고려해서 에너지 복지를 확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긴급) 지원이 주로 난방에 맞춰졌다면, 냉방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할수록 이용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에너지 복지는 생태적 한계를 반영한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 공공성을 쟁점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 필수(또는 기본) 에너지 보장량을 설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주로 전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가스, 석유, 석탄 등을 아울러 전체 에너지 사용량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도시가스 접근성 여부가 난방(비)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가급적 신속하게 연탄 사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복지를 추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에너지 복지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의 원칙을 되묻게 만든다. 예컨대, 취약 계층 지원(비용 지원, 효율 개선), LNG/LPG 보급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청주시 에너지복지사업: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농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취약 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 잘 알려진 대로, 에너지 빈곤은 주거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적으로 주택 노후화, 단열 수준에 따라 냉난방을 통한 적정 온도 유지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에너지 복지에 효율 개선이 포함된 이유이나 에너지 빈곤층(저소득층) 대상 단열 개선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많지 않은 듯하다. 특히 주택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이 얼마나 되는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 지원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은 상당 부분 겹친다. 에너지 빈곤과 주거 빈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위기 취약성까지 연계해서 사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도입, 에너지 복지법 제정을 놓고 (기초생계급여와의) 중복 지급 문제가 제기되었던 만큼 에너지 복지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에너지복지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복지와 기후정의가 연결된 만큼, 에너지복지와 연관된 사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폭넓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기후정의 조례 추진 시 에너지복지 조례와의 관계 등).

[ 토 론 6 ]

## 에너지복지는 단순히 춥고 더운 문제가 아닙니다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

### • 무엇이 문제인가

(중략)

충북은 청주시가 흥덕구 660명, 서원구 595명, 상당구 318명 등 1573명, 충주시가 772명으로 청주와 충주에서만 요금 체납, 단전·단가스 사례 비율이 충북 전체의 73.8% ... (중략)

에너지 취약계층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응은 더딘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에너지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수준을 지원 기준으로 삼거나 이미저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처가 에너지 복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추정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소득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지만, 에너지 지출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후주택·가건물 등에 거주하거나 노후한 냉·난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상승 비용원인을 고려하고 지역·가구별 특성 등을 반영한 에너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영대 의원은 “전기료 체납, 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 요금을 추진했고 연료비 인상에 저소득층은 더 큰 생활고를 겪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2023. 5. 18자)

• 청주시 에너지 복지관련 정책과 예산 현황과 문제점

[ 복지국 소관 난방비 지원 현황 (출처 : 청주시의회. 2023. 2월 제공 받음) ]

**청주시(복지국) 추진사업 현황**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월동난방비 지원** (선별지원)
  - (사업명) 2022년 개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세대
  - (규모) 295가구 (상당구 81, 서원구 89, 흥덕구 68, 청원구 57)
  - (지원금액) 73,750,000원(가구당 250,000원)
  - (재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자금
  - (지원기간) 2022. 11. 18.(금)한
  
- 주거복지센터 주거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 (선별지원)
  - (기간) 2022. 12월 초
  - (대상) 4가구(저소득층 중 등유 사용 가구)
  - (내용) 가구당 30만원 연료 지원
  
- 민간기관 후원연계 지원** (선별지원)
  - (사업명) 2022년 셀트리온복지재단 등유 나눔사업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중 등유 사용 가정
  - (후원대상) 100가구(가구당 등유 200L)
    - 상당구 27, 서원구 31, 흥덕구 23, 청원구 19
  - (지원기간) 2022. 10월 배부 완료
  
-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축한기 이불 지원** (선별지원)
  - (사업명) 2022년 위기가구 사례관리
  - (대상)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서비스연계대상자
  - (규모) 66채(상당구 17, 서원구 18, 흥덕구 18, 청원구 13)
  - (지원금액) 6,930,000원(국비)
  - (지원기간) 2022. 11. 15.(화) 배부
  
- 한파대비 취약계층 보호 난방용품 지원** (선별지원)
  - (지원기간) 2022. 12. ~ 2023. 1.
  - (지원대상) 400여명(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수급자 등)
  - (사업비) 37,000천원 ※ 도 재해구호기금 교부액
  - (내용)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용품(내의 등) 및 지원

[ 문제점 ]

○ **청주시 자체 정책개발 내용이 없음.**

- 고유가 등으로 지난 겨울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컸음. 그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걱정이 많았음.
- 위 복지국 추진내용중 순수 시비 성격은 주거복지센터뿐이고 나머지 공동모금회, 민간기관 후원 연계, 이불지원(국비), 난방용품지원 (도비)으로 자체 예산편성이 안됨.
- 반면 2022년 타 기초지방정부인 안성시 개인별 10만원, 안양시 개인별 5만원, 파주시 가구별 20만원 등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지원금 수준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자체 정책 개발한것과 대비됨

○ **정책은 있으나 실효적이지 않음**

- 청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이 있지만 고작 4가구로 가구당 30만원의 연료비로 감당 하겠는가

○ **현실과의 간극은 어떻게**

- 고유가로 난방 등유가격이 오름에 따라 시기의 엄중함을 인식한 중앙정부는 등유바우처 기존 31만원을 64만원으로 인상함. 현실적 문제는 난방이 필요한 시기가 평균 5개월을 감안할 때 인상된 지원액은 두달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함. (1드럼 1월 사용기준시 지난해말 1드럼이 34만원 수준이었음)
- 남은 3개월의 난방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 에너지재단을 통해 여름 에어컨 보급 사업을 몇해전부터시행함. 올해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설치만 할뿐 전기료 지원은 없어 실제적 사용의 한계  
(2023년 청주시 113가구 지원예정)

[ 2023 청주시에너지복지 예산현황 (출처 : 청주시청홈페이지. 2023 세입세출예산서) ]

[ 3-1 ]

에너지 복지 실현		3,662,460	6,444,650	△2,782,190
	국	78,750		
	기	923,000		
	도	318,650		
	시	2,342,060		
가스 안전관리		10,960	11,960	△1,000
201 일반운영비		9,960	11,960	△2,000
01 사무관리비		9,960	11,960	△2,000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현수막 제작 70,000원*2매*4회		560		
○에너지절약 홍보용품 구입 10,000원*100개		1,000		
○9K하이닉스 질소산화물 상해협의회 참석수 당 100,000원*7명*12회		8,400		
203 업무추진비		1,000	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0	1,000
○에너지관리사업 업무추진 1,000,000원		1,000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550,000	151,000	399,000
402 민간자본이전		550,000	150,000	4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50,000	150,000	400,000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550,000원*1,000세대		550,0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836,000	166,000	1,670,000
	기	923,000		

[ 3-3 ]

부서: 신성장산업과  
장학: 신성장산업 육성  
단위: 에너지 복지 실현

(단위: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63,000	
400 자치단체동자본이전	157,500	0	157,500
	국	78,750	
	도	15,750	
	시	63,000	
02 공공관용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7,500	0	157,500
○LPG용기 사용가구 시정개선사업 225,000원*700가구	157,500		
	국	78,750	
	도	15,750	
	시	63,000	
청주시 지역에너지 장학 추진	134,000	134,000	0
307 민간이전	134,000	134,000	0
05 민간위탁금	134,000	134,000	0
○청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134,000,000원	134,000		

[ 3-2 ]

부서: 신성장산업과  
 정책: 신성장산업 육성  
 단위: 에너지 복지 실현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273,900		
	시 639,100		
402 민간자본이전	1,836,000	0	1,836,000
	기 923,000		
	도 273,900		
	시 639,100		
03 민간위탁사업비	1,836,000	0	1,836,000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 26,000,000원	26,000		
	기 18,000		
	도 2,400		
	시 5,600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사업 1,810,000,000원	1,810,000		
	기 905,000		
	도 271,500		
	시 633,500		
수소차 충전소 운영	829,000	610,000	219,000
307 민간이전	829,000	610,000	219,000
05 민간위탁금	829,000	610,000	219,000
◎청주수소충전소 민간위탁(오창) 235,000,000원	235,000		
◎도원수소충전소 민간위탁(내수) 190,000,000원	190,000		
◎가로수수소충전소 민간위탁(강서) 202,000,000원	202,000		
◎문의수소충전소 민간위탁(문의) 202,000,000원	202,000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	145,000	70,290	74,710
	도 29,000		
	시 11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5,000	70,290	74,710
	도 29,000		
	시 116,000		
01 시설비	145,000	70,290	74,710
◎용곡2리 도로 보수 사업 100,000,000원	100,000		
	도 20,000		
	시 80,000		
◎노현리 농로 포장공사 45,000,000원	45,000		
	도 9,000		
	시 36,00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157,500	66,400	91,100
	국 78,750		
	도 15,750		

※. 청주시가 여러부서에 걸쳐 다양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진행중임. 위 표는 청주시가 대표적인 정책목표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설정하고 있기에 대표적 예산 편성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언급함.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모든 부서의 사업을 분석해야 함을 인지하고 언급함.

[ 문제점 ]

○ 에너지복지실현 구호성인가

- 2023년 청주시의 에너지 복지 예산현황은 위와 같음. 타부서에 에너지복지와 비슷한 예산이 있음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대표적인 에너지복지 정책목표를 가진 예산서상으로는 에너지복지실현 의지가 있는가를 궁금케함.
- 본예산은 ▲도시가스 공급관설치 지원 5억5천만원(시비), ▲저소득층 LED등 교체 2천6백만원(기 도시),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18억(기도시), ▲수소차 충전소 운영 8억 2천만원(시비), ▲광 산주변마을 도로사업 1억 4천만원(도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1억 5천만원(국도시), ▲청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운영 1억 3천만원(시비).
- 1차 추경을 통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천만원(국도시)이 추가됨.

○ 에너지복지실현의 의지는 어디에

- ▲광산주변마을 도로사업이 에너지 사업인가?
- 순시 시비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수소차충전소 ▲에너지센터운영비로 15억 수준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에어컨 보급 사업이 있다면 전기료에 대해 청주시가 시비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의지적 요소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임.

● 청주시 복지의 방향과 제언

1. 청주시에너지기본조례 (이하 시에너지조례)에 충실 하자

- 발제자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에너지기본권” 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
- 시에너지조례 제 6조 1항에서 “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한 바와 같이 청주시는 이미 “에너지기본권” 을 설정하고 있음. 이에 청주시는 조례에 따른 생활수준과 관계 없이 에너지빈곤, 에너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 지역에너지계획,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에너지위원회 & 에너지센터 활성화,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등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만이라도 충실히 이행한다면 청주시는 모범적인 에너지복지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임.

2. 청주시 자체 시책으로서 에너지복지정책 생산력을 키워야 한다

- 앞선 사업예시에서는 청주시의 에너지복지정책 자체 생산능력이 아직 미미함을 확인함.
-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난해 파주등 난방비 지원정책 등의 사례를 모델로 청주시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현장과 깊이 고민해야함.
- 더불어 에어컨 설치는 했지만 전기료 지원이 없어 사용이 어려운 상황과 같이 중앙정책은 존재 하나 현실적이 못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정책도 함께 고민되어야함.

- 고민의 수준은 한부서의 책임으로 맡기지 말고 유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공동주택과, 신성장산업과 등등과 부서 벽을 허문 형태의 논의들이 오고가야함.
- 5월부터 청주시가 폭염대비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반기운 소식처럼 부서의 협업을 통해 대안들을 만들기를 바람.

### 3. 에너지복지 지원대상자를 현실성 있게 재설정해야 한다.

- 도입부 신문기사 내용과 같이 에너지복지 지원대상을 단순 소득 중심이 아닌 에너지 지출 비용을 반영한 형태로 바뀌어야 함.
- ▲노후주택, 가건물등 건물의 노후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형태, ▲냉난방기 노후와 존재 유무를 통한 특성별 지원대책,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통한 에너지 접근성에 대한 접근처럼 실제적 에너지 복지 보장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 필요.

### 4. 중장기적 계획을 통한 에너지 자립, 에너지복지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

- 노후 주택의 에너지복지는 한계가 있음.
- 예시1)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는 도시보다는 구 청원군 지역 농촌형 모델로 마을소유 공유지에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시스템을 집집마다 구축, 잉여 생산된 전기료는 마을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형태의 자립마을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유기변동과 전기료 인상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 가능
- 예시2) 고령화 문제와 기후위기의 문제는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에 주거복지정책을 통한 에너지자립 케어형 대안주택을 만들어 감으로서 장기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음.

### 5. 시급한 당장의 문제들도 검토해 보자

- 청주시가 지난해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문의면 3개마을 130세대로 진행되었고 올해 6억의 국도비로 시행중인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진일보한 에너지복지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고유가라는 지난해의 경험을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난방유를 써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일명 “시립저유소” 를 설치하여 저렴한 때 공공난방유를 비축하여 예산 확장 없이도 보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농촌지역은 여름철 저렴한 때 기름을 보관하기 위해 최대한 큰 크기인 5드럼용 기름통들을 확보하고 있음에 착안한 내용으로 위 사업을 시니어클럽, 자활등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사업으로 운영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와는 다른 개념임)

### 6. 전달체계를 공공히 하자

- 시에너지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를 매월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과정 모니터링, 대안적 에너지복지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함.
- 에너지위원회는 관중심이 아닌 민 중심 관 지원형태의 거버넌스를 지향함.
- 민은 청주시에너지센터가 역할을 담당해야함. 그럴려면 현재의 상근 3명, 1억3천4백만원이라는 열악한 인력과 운영비부터 개선. 상근인력과 예산규모를 확대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함.



■ 토론회

#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시대 지역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 청주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과제 논의 -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

##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 위기

지난 겨울 역대급 한파 속에 난방비가 ‘폭탄’ 수준으로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지난 2022년 61조원으로 전년도(31조 원)보다 2배 가량 비싸졌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2022년 7월 전년 동월대비 6.3%를 고점으로 하여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2023년에도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이전 저물가 시기(2010~2019년 평균 1.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무더위를 앞두고 냉방비 폭탄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지 기우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되었지만 공공 요금 등 그동안 누적된 비용 인상은 점차 현실화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전기료가 전년 동월대비 29.5%, 도시가스요금이 전년동월대비 36.2%로 이미 크게 상승한 상황이며,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달하며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2005년으로,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여중생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말한다. 에너지 빈곤층은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겨울철 거실 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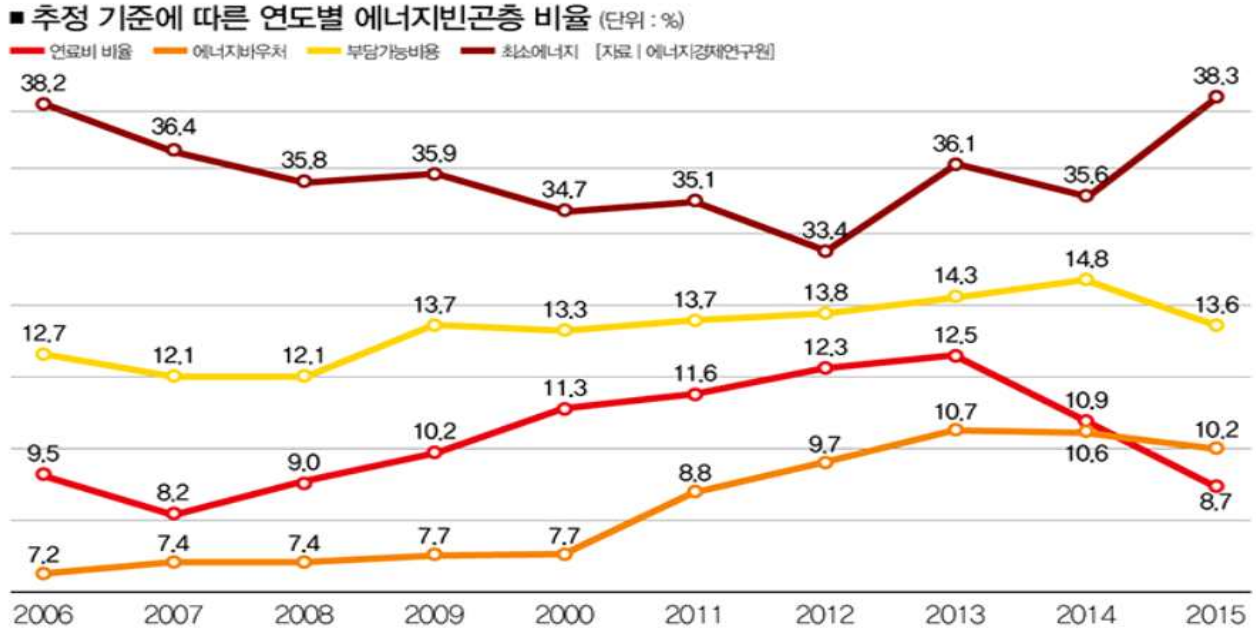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영국의 선례를 인용해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간주하지만,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니다.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을 추정하는 기준은 4가지이다.

- ▶ 가구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연료비 비율 기준)
- ▶ 가구원 수별 평균 연료비의 70% 이하를 연료비로 쓸 때(최소 에너지 기준)
- ▶ 가구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노인이나 영유아가 포함됐을 때 (에너지 바우처 기준)
- ▶ 가구 경상소득에서 연료비 지출액을 뺀 비용이 최저 생계비에서 최소 광열비를 뺀 비용보다 적을 때 (부담 가능 비용 기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이 달라진다.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계가 밀받침 되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제대로 된 통계 또한 있을 리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에너지에 쓰는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본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득이 적어 에너지비용을 극도로 줄인 저소득층은 에너지 빈곤층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득도 많고 가구원 수도 많아 에너지비용이 높은 가구는 에너지 빈곤층에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오래된 집은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데 이 집이 강남 재개발지역의 고가아파트라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집주인이 에너지 빈곤층에 속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에너지 빈곤층 추정 기준은 이와 비슷한 오류들을 안고 있다.

## 청주시 에너지 복지 정책

청주시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현황을 살펴보자.

##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원 현황]

(2022년 기준)

사업명	주관부처 (전담기관)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가구(수)	지원금액 (백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li> <li>※ 생계·의료·주거 수급권자만 해당</li> <li>■ 사회복지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li> <li>- 약 1백만원/가구</li> <li>■ 복지시설</li> <li>- 약 1천만원/시설</li> </ul>	저소득층 180 복지시설 11	16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국비 100%)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li> <li>※ 자가 및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li> <li>■ 사회복지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li> <li>- 평균 250만원/가구 (시공+냉방)</li> <li>■ 복지시설</li> <li>- 최대 1,000만원/시설</li> </ul>	난방 93 냉방 71	175
에너지바우처 사업 (국비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방법 :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감면)</li> <li>■ 지원금액 (가구원 수 별 상이)</li> <li>- 153,700 ~ 385,300원</li> <li>※ '22년 한시적</li> <li>- 277,800 ~ 677,100원</li> </ul>	16,055	5,817
등유바우처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국비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방법 : 등유바우처 카드</li> <li>■ 지원금액 : 가구당 310천원</li> <li>※ '22년(한시적) : 641천원</li> </ul>	19	12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국비 100%)	한국광해광업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방법 : 실물카드 지원</li> <li>■ 지원금액 : 472천원/가구</li> <li>※ '22년(한시적) : 546천원</li> </ul>	302	164
등유, LPG 난방비 지원사업 (국비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 난방수단이 등유·LPG인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방법 : 실물카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종이쿠폰(차상위계층) 지급</li> </ul>	1,911	752

청주시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제도, 무더위 쉼터 등이 있으며, 대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주택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시설 등의 단열, 창호, 조명 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시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LED 교체사업,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180가구와 복지시설 11개소에 LED 교체사업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난방 93가구, 냉방 71가구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 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②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2015년 12월에 시작된 저소득층에 에너지쿠폰을 지급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지급받은 가정은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공급해준 판매처는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여 나중에 그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청주시에서는 16,055가구에 58억 1,700여 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저소득층 가운데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에 한하며, 자가 및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사업 외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등유바우처 사업으로 19가구에 1,200만원,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302가구에 1억 6,400만원,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911가구에 7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다.

③ 무더위쉼터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을 쉴 수 없어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폭염대책으로 무더위 쉼터나 폭염대피소처럼 냉방이

이뤄지는 공간을 지정해 모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고안해낸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온열질환 예방법을 홍보하거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폭염 대책의 전부인 지역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효한 대책이다.

청주시에는 총 838개소의 무더위한파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노인시설(경로당 등), 복지회관,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등이 있다.

### □ 청주시 무더위한파쉼터 현황

구분	계	노인 시설	복지 회관	마을 회관	보건소	행정 복지 센터	종교 시설	금융 기관	주민 센터	기타*
청주시	838	738	9	1	12	43	2	26	2	5

#### ④ 청주시 난방비 등 지원현황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청주시 난방비 등 지원 현황을 보면 후원사업과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살펴 볼 수 있다.

### □ 청주시 난방비 등 지원 현황

구 분	비 고 (후원처)
○ 2022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절기 월동난방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세대</li> <li>- 지원내용 : 73,750천원 (295가구 / 세대당 250천원)</li> </ul> </li> </ul>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셸트리온복지재단 등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li> <li>- 지원내용 : 200,000L (100가구 / 세대당 200L)</li> </ul> </li> </ul>	셸트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징검다리 연탄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세대</li> <li>- 지원내용 : 438가구 / 119,000장</li> </ul> </li> </ul>	(사)징검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시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세대</li> <li>- 지원내용 : 70,000천원 (700가구 / 세대당 100천원)</li> </ul> </li> </ul>	사회공헌자금 (지정기탁금)
<b>○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 10월 ~ 3월</li> <li>-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li> <li>- 지원내용 : 월 110천원 / 1,628건 / 2,531명 / 191,436천원</li> </ul> </li> </ul>	국비
<b>○ 2023년 하절기 냉방비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신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세대</li> <li>- 지원내용 : 575세대 / 세대당 200천원 지원</li> </ul> </li> </ul>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지역 의원으로서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책>

최근 경제악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층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빈곤층의 대다수가 1인가구이며 중장년, 노인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올 여름 무더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지원에는 예산이 따른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언제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에너지 빈곤층은 폭염과 혹한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 ① 청주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현재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5군데가 있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3개 광역 자치단체와 광주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서구 등 2개 기초자치단체이다. 청주시 또한 에너지 복지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에너지 기본조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 뿐이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조례의 핵심은 에너지 빈곤층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혜자의 누락이 없게끔 세밀하게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정확한 자료와 면밀한 데이터로 만들어지며 미흡한 통계와 주먹구구식 실태조사에서는 양질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실태조사는 중요하다.

하지만 에너지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국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그런 면에서 현재 국회에서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논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기만 하다. 국내에선 이미 16년째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에너지복지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부족 문제 기초생활보장법과의 중복 문제, 주무부처(산업부-보건복지부) 결정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시한을 넘겨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에너지 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에너지복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복지법이 제정된다면 조례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에너지복지법 제정 전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법제정의 논제를 조례제정에서도 유효하다. 예산 확보, 주무부처 결정(신성장발전과-복지정책과),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 청주시 에너지불평등 현황 파악 등 실효성 높은 조례제정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② 청주지역 내 에너지 불평등 해소 노력

청주시 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도농 간의 편차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는 청주지역 내 에너지 불균형 현황 파악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상당구 71%, 서원구 81%, 흥덕구 92%, 청원구 93%로 상당구와 서원구의 보급률이 저조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미원, 문의, 낭성, 남일, 가덕, 북이 등)의 단독주택에서 기인한다.

### 청주시 도시가스 보급률

(2022. 12. 31. 기준)

현 황	총 세대수 (A)	공급 세대 (B)	미공급 세대 (C)	보급률(%) (B/A*100)
합 계	393,697	334,893	58,548	85%
상당구	87,184	61,839	24,941	71%
서원구	90,101	73,094	17,160	81%
흥덕구	125,730	115,243	10,413	92%
청원구	90,682	84,717	6,034	93%

※ 출처: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하고 지정학적으로 도시가스 관 설치 등이 불가능한 공급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책 마련을 통해 청주지역 내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b>공급가능 지역에 대한 보급률</b>							(자체 분석)
현 황	총 세대수 (A+D)	공급 가능 지역				공급 불가 <sup>(1)</sup> (D)	
		합 계 (A)	공급 세대수 (B)	미공급 세대수 (C)	보급률(%) (B/A*100)		
합 계	393,441	352,493	319,476	33,017	90.6%	23,759	
<p>(1) 공급 불가 :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미원, 문의, 낭성, 남일, 가덕, 북이 등)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p> <p>※ 오송, 강내, 내수 등 지역에서 일부 오차 발생 (공급 가능지역과 불가지역 구분이 어려움)</p>							

## [참고자료]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1

## 지원 내용

①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 차단



**벽면 단열재(입출법 또는 열반사) 부착 → 목 또는 경량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② 창호공사 :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PVC창호 교체로 기밀성 강화



**신규틀 시공 → 우레탄폼사춤 및 실란트 마감 → 노출부 마감**

\* 창호 시공시 기존 창호 크기 보다 경미하게 줄어들을 수 있음

\* 기존틀 철거 또는 비철거 시공 할 수 있음

③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시설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않은 경우 지원 불가.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설치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일반 보일러 설치지원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 등 추가지원 불가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왼쪽부터 가스보일러 시공 전/후, 기름보일러 시공 전/후)

## 2

### 대상가구

- 지원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3

## 지원 절차

<p>사업대상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주체) 기초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 복지기관 등</li> <li>▪ 가구에게 직접 신청을 받거나,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굴·추천*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단에 신청</li> <li>*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필수 등록</li> <li>* 지역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 수급자 분포 및 가지원 실적 등 고려</li> </ul>
<p>대상자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주체) 재단(지자체 협조)</li> <li>▪ 재단 : 전화 · 주소 확인 작업 및 지자체 자격확인 요청</li> <li>▪ 지자체 : 재단에서 자격확인 요청 시(유관기관 추천 포함) 대상 자격 확인</li> </ul>
<p>방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주체) 시공업체</li> <li>▪ 대상가구에 에너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내역 확정, 관련서류* 수취 후 시스템 등록</li> <li>* 지원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주택소유주동의서, 방문조사서</li> </ul>
<p>지원내역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주체) 재단</li> <li>▪ 대상가구의 지원내역(견적) 및 등록된 서류 등을 확인 후, 지원가구로 승인</li> </ul>
<p>시공 및 물품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주체) 시공업체 또는 자재·물품업체</li> <li>▪ 시공 및 물품설치, 관련서류* 수취 후 시스템 업로드</li> <li>* 시공확인서, 물품설치확인서</li> </ul>
<p>모니터링 및 지원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주체) 재단</li> <li>▪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li> </ul>
<p>현장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주체) 현장점검 전문업체 / 재단</li> <li>▪ 전문 점검업체 : 시공 품질을 중심으로 현장점검</li> <li>▪ 재단 : 지원내역 확인 등 상시 점검</li> </ul>
<p>만족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주체) 리서치 전문업체</li> <li>▪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li> </ul>
<p>하자 발생시 A/S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보증이행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에어컨 2년, 보일러 3년</li> </ul>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기후위기·에너지위기 시대, 지역 에너지 빈곤층 대책은?

발행일 2023. 6. 14.

연락처 043-267-0151 [cbcitizen@hanmail.net](mailto:cbcitizen@hanmail.net)

※본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